

본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 회의체 구성·연장 의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0차 본위원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는 6월 7일(월) 16: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 4개 안건*을 심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제10차 본위원회 의결 안건

- ① '플랫폼산업위원회' 구성·운영(안) ② '공공기관위원회' 운영 재가동(안)
- ③ '관광산업위원회' 운영 연장(안) ④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이번 본위원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등으로 인해 11개월 여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산업에서 제기되는 과제와 고용 위기가 계속되는 관광산업의 발전 및 종사자 숙련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 발족 등이 실무단위와 차관급 회의에서 차례로 논의된 바 있었고, 이날 회의에서 최종 추진됐다.

경사노위는 작년 봄부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노사정 공감대 속에서 노사정 선언(3.5선언)과 노사정 협약(7.28.협약)을 차례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호텔·항공·플랫폼노동·자동차 부품 등 코로나19 위기업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

| 본위원회 | 01-02p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 회의체
구성·연장 의결

| 신임 상임위원 취임사 | 03p

대전환시대,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대화의 큰 그릇

| 위원회활동 | 04-05p

휴가 분산은 노사정이 만드는
백신입니다

| 이슈브리프 | 05-07p

코로나19 팬더믹,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와 대응 전략



| 국제활동 | 08p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2021~2023년도 의장 후보국 선출



ISSN 2636-1337



항을 청취한 후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건의하여 실행된 바 있다. 입법적 불비 사항이던 ‘근로자대표제’에 관한 개선방안에 합의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원칙에 합의하는 등 의제논의에서 성과를 냈다.

또한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청년·비정규직·여성·소상공인 위원회 등 계층별 위원회도 발족시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는 물론 구조적인 계층의 문제를 다루는 등 활발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플랫폼산업위원회』는 작년 배달업종 분과위에서 논의하던 의제를 확장하여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노동종사자의 기본권 권리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연말 1기가 종료됐던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번 의결로 공공기관의 임금제도 및 임금피크제를 주요 논의 의제로 후속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관광산업위원회도 회의기간이 연장되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정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문성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사노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문제 해결 등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고,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사회적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본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되어 처음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 후 많은 계층과 만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키워드가 ‘소통’이라며,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지만 다른 주체들의 생각도 듣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각자의 파이를 키우는 것 보다는 파이를 어떻게 나

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명 위원장은 “연말부터 4월까지 사회적 대화가 중단됐었고, 정부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항공 산업, 교원, 공무원 등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 곳이 많지만 정부부처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말고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면서, “노사의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동반자적 관계와 공정하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 설정을 위해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도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심의되기를 바라고, 부당노동 행위 형사처벌, 해고자와 실업자 기업노조활동, 파업 시 대체근로 보완 입법도 조속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지내다 고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경덕 장관은 “정부는 어려운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로 심해진 격차를 줄여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본위원회를 계기로 경사노위는 노·사·정 및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고령사회 등 미래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sc**

이세종 전문위원

신임 상임위원 취임사

대전환시대,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대화의 큰 그릇으로

배 규 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취임하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대나 요구에 비해 위원회가 처한 어려운 환경과 구조 또는 상황이 엄중하고, 이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과 의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개혁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18년 11월에 발족했고, 정부와 사회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우여곡절 끝에 옥동자를 낳듯 어렵사리 노사정 합의를 이뤄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이슈를 놓고 이해대립이 부딪쳐 노사정간 타협이 코앞에서 좌절되는 아픈 경험도 겪었습니다.



현재 경제사회 곳곳에는 사회적 타협을 이룬다면, 쉽게 해결되거나 해결의 물꼬를 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해결방안을 만들어낼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그간의 성과와 시행착오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노사정 주체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막혀있다면 돌파구를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노사정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에 급급해 너무 서두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코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대화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주체와 정부 및 사회 각계와 함께 국내·외적인 큰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 이후 자본주의 변화’ 등 세계적 추세는 물론, ‘저성장시대로의 진입’과 ‘고령화’라는 국내적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고용과 노동체제를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개혁하거나 변화,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큰 과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의제/업종/계층/연구회 등 기존 회의체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잘 마무리하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중요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고용과 노동의 과제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사노위가 소수의 관련자, 전문가, 정책담당자만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대화의 큰 그릇이 되고, 국민적 공론화를 위해 중요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저는 경사노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조정하여 ‘갈라진 길’을 다시 모아 ‘한 길’로 만드는 데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sic**



위원회활동

휴가 분산은 노사정이 만드는 백신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노사정 협력 결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14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

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노사정 협력 결의」 선언식을 개최하고 노사정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름휴가 분산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가철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노사정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여름휴가 대책에 발맞춰 노사가 여름휴가 시기 등을 최대한 분산 실시하여 방역수칙이 지켜지도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기 노사정 협력 결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곧 여름휴가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0~6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나,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노사정은 이번 여름휴가철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에,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 중 “노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력하며, 감염병이 사업장에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산하조직과 회원 기업을 적극 독려한다”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 노력한다.

1. 노사는 안전한 휴가를 위해 6.7.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에 적극 협력하며, 감염병이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시기 및 장소 분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도록 산하조직과 회원 기업에 적극 안내한다.
2.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 노사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 분산을 적극 요청하며,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 제공하기로 한 인센티브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3. 노사정은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고용 유지,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한 정부 역할을 제고하고, 노사정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 실천한다.

2021년 6월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표

산하 조직과 회원 기업에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정부는 특히 분산 운영이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적절히 제공키로 했다.

경사노위 배규식 상임위원은 이날 선언식의 대표자로 나서 “최근 정부에서 여름휴가 시기와 장소 분산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이 보고된 바 있었다”며, “정부가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작년 7월28일 체결한 협약에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노사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만큼 긴급 논

의를 통해 오늘 결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남용우 한국경총 상무, 박재근 대한상공의소 상무,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sc**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과

이슈브리프

코로나19 팬더믹,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와 대응 전략

김 명 환 전문위원

소상공인의 의미와 특성

지난해 8월 4일 노측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회가 발족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사측약자인 소상공인의 사회적 대화체인 소상공인 위원회가 출범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 일부업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8년 기준 620.6만 개 소로 전체 기업의 9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종사자¹⁾는 583 만 명으로 그 비중이 44.2%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도·소매업, 숙박업, 미용업, 소규모 납품제조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생활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은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경영자임과 동시에 스스로의 노동력을 자신의 사업장에 제공(self-employed)한다는 측면에서 노동공급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상공인위원회의 출범은 타인의 자본과 결합된 노동의 지위를 논함으로써 시작된 전통적 사회적 대화의 범주가 자신의 자본과 결합된 노동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평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특성으로는 우선 과당경쟁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은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25.1%로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다. 이는 미국의 약 4배 일본의 약 2.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까닭에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소상공인이 집중된 도·소매업(1년 59.5%, 5년

1) 소상공인 종사자는 보수를 받고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 무급가족 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주를 포괄한다.



27.9%)과 숙박·음식업(1년 62.2%, 5년 20.5%)에서 생존율이 매우 낮으며, 전체 소멸기업²⁾ 69.2만 개소 중 소상공인이 68만 개소로 98.25%에 이른다. 다음으로 경직적 비용구조를 들 수 있다. 2017년~2019년의 소상공인 영업비용 비중은 재료비(36.3%), 임차료(21.2%), 인건비(18.8%)로 고정비인 임차료·인건비의 비중이 40%에 달한다. 즉, 소상공인의 비용구조는 높은 고정비로 인해 경직적인 반면 매출은 가변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소득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이른바 나홀로 자영업자가 72.9%에 달하여 영세성이 두드러졌고 60대 이상이 29.7%로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과당경쟁특성, 경직적 비용구조, 영세성은 그 동안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삼아온 배경³⁾이 되어 왔고,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소상공인 의제·정책논의 성격도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

최근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영업이익 및 월 평균 방문객이 각각 25.9%, 35.6%, 35.4% 감소하였으며, 평균 매출손실액은 외식업 2.3억 원, PC방업 1.4억 원, 노래방업 1.0억 원, 카페 0.3억 원에 달했다. 임금노동부문과 더불어 일자리·소득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부문의 이러한 어려움은 국

민의 경제활동공간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감염병 방역지침에 의한 소득감소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감염병 방역의 핵심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일괄적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불가피하게 상권의 유동인구를 감소시키고 외식업·숙박업·전통시장 등 면대면 영업특성을 가지는 소상공인 부문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방역의 공익적 필요성과 소상공인이 이에 협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손실 간 균형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예측성이 강화되고 있다.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판매액은 2018년 24.4%에서 2019년 28.6%, 2020년 33.9%⁴⁾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비대면 거래가 자리 잡으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다. 문제는 규모의 경제와 배송체계를 갖춘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프랜차이즈업 갑을관계 사례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예측관계는 불공정 거래를 야기하고 소상공인의 소득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기업-소상공인 간 이윤분배과정에서 약자인 소상공인의 소득을 보호할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취약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과 재기의 어려움이다. 감염병 사태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개별 가게에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다복지지출을 야기한다. 이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는 노란우산공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폐업과 같은 생계위협에 대응하는 것 외에 체계적인 재기·재취업 지원측면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운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침체기의 소득보

2) 기업생멸행정통계상 소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의미한다.

3) 소상공인 보호·육성정책은 1997년 IMF사태 당시 대규모 실업해소,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체계화 된 이후, 금융, 기술, 마케팅, 인프라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 왔다.

4) 2020년 전체 소매 판매액 475조 원 중 온라인 판매액은 161조 원이다.

전과 회복기의 재기지원에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기대응 전략

소상공인부문 전반에 걸친 최근의 위기는 단순히 감염병으로 인한 매출감소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인구통계학적 취약성, 대자본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분배갈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존재 등이 얹혀 한꺼번에 드러난 것에 기인한다. 그런 만큼 체계적인 대안마련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소상공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시급성과 실효성에 따라 정부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별 지원정책을 체계화 시켜야 한다. 1단계 지원으로는 영업정상화시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지원이 요구된다. 매출감소에 대응하여 고정비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지원은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각한 영업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정상화시까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초점을 두는 단계이다. 3단계 지원은 궁극적 해결책으로서 영업정상화와 소비활성화 지원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에 맞추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등을 통해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꾀해야 한다.

둘째, 공정성과 상호대등성에 기반을 둔 비대면 거래 시스템의 확립이다. 소상공인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 간 자본규모에 따른 시장분절과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사회후생손실을 야기한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성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장 규모나 시장 점유율의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종래 프랜차이즈 가맹과는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시장 확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안마련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입점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간 제도화된 대화를 통해 기술·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공공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규모의 경제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전통적인 노란우산공제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포괄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종합계획이 요구된다. 노란우산공제가 폐업 소상공인의 소득을 공제방식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이라면, 고용보험은 소득보전을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재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실업자의 인적자본 투자수익이 임금노동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조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고용보험의 메커니즘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설계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폐업에 대응한 소득보전제도와 재기를 위한 경영능력개발을 포괄하는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위기 시의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상공인계층과 전통적 사회적 대화주체 간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확장을 꾀해야 한다.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부문은 임금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실업인력을 흡수하여 일자리 위기를 완화하는 일종의 고용저수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상황에서 보이는 이러한 일자리 순환 패턴과는 달리 임금노동시장과 소상공인시장에 동시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임금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노동자가 자영업 창업을 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위기 극복에 있어 소상공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동계와 경영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slc**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제활동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2021~2023년도 의장 후보국 선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4월 28일 위원회 7층 중회의실에서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의장 후보국 선출을 위한 아시아 회원국 의결권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은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아시아 대륙 사무부총장국으로서 차기(21~23년)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이하 연합) 의장후보국이 선정 회의를 주최하고 주관하였다.

연합 의장국은 2년 임기로 대륙별(아프리카-아시아-유럽-남미) 순번제로 역임하며 차기년도는 아시아 순번이다. 이에 위원회는 아시아 이사국(중국, 러시아)을 중심으로 수차례 사전 실무회의를 통해 아시아 대륙 이사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사전 정리하였다.

한국은 타 국가에 우선권을 주되, 지원국이 없는 경우 의장국 검토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에 지원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러시아는 의장국 지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사전 실무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차기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의장 후보국을 선정 하기 위해 아르미니아, 중국, 러시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베트남, 한국 등 6개국 의결권자(위원장)가 한자리에 모였다.

* 아시아(유라시아 및 중동)대륙 회원국 수(11개국) :
(정회원) 아르미니아, 중국, 한국, 요르단, 레바논, 러시아
(옵저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준회원) 라오스, 마카오, 베트남

인사말씀에서 문성현 위원장은 “차기 의장 후보국 선정

은 향후 연합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택이므로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간의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기구연합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의 초석을 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번 회의 개최 목적과 기대에 대해 밝혔다.

회의 순서는 개회 및 환영사,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안건논의, 차기의장후보국 소견 및 활동계획 발표, 토론의 순서로 이루어 졌으며, 안건논의 시, 러시아시빅챔버연합은 의장국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만장일치로 러시아시빅챔버연합이 연합 의장후보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경사노위는 아시아 대륙 사무부총장국으로서 회원국들의 공식적인 동의로 결정 된 최종 결과를 사무국에 전달하였다. 의장국 선정은 연합 정관 제8조2항에 의거 9월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차기 의장국의 활발한 활동 및 협력을 통해 연합의 설립목적인 ‘전 세계 경제, 사회 파트너들 간 대화 촉진 및 노사정협의의 기구 미설치 국가의 설립지원’과 ‘경제성장이 인간적, 사회적 목표와 부합할 수 있도록 균형적 발전 촉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국 간 대화와 교류를 확대 하고 각 국가의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손옥이 전문위원

